

군 공항 이전 등 광주·전남 현안 사업 적극 지원

광주, 무등산방공포대 이전·미래차 산단·복합쇼핑몰 등 추진
전남, 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남부권광역관광개발 등 성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상〉 지방 정책 어디까지 왔다

10일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한 이유다. 이에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 시도별 핵심 공약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분권 이행을 위한 제도적 성과 등을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2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10일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광주·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광주·전남도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과 무등산 방공포대 연내 이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이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정부 지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아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가 공동으로 요청한 '시도별 민선8기 주요성과'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광주·전남도의 현안·건의사업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공약 등으로 진행된 광주시의 사업 중 '광주 미래 성장동력(AI·미래모빌리티·반도체) 가속화' '100만평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을 광주시 추진 사업 중 성공 사례

운동부 학생들 무리한 경기 일정 사고 위험 ▶6면

양현종 vs 김광현 8년 만에 광주서 빅매치 ▶18면



굿모닝 예향 - 나눔 문화 '하정웅 컬렉션' ▶22면

로 소개했다.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기획비 국비 7억원 반영)과 '광주 AI 영재고 설립' (기획비 국비 10억원 반영)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선 과정에 뜨거운 논란이 됐던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국가 지원 사항 발굴 중이며 우선 지원사항으로 교통혼잡 개선,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등 교통인프라 개선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군공항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 등과 연내 이전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주군공항 이전에 따른 국가차원의 지원과 방공포대 연내 이전 로드맵과 관련해 "방향성은 맞고 이 내용으로 광주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부처와 논의를 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남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고예산 역대 최대(8조6525억원) 확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을 지난 1년의 성과로 꼽았다.

국비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 광역관광개발 사업 3조원 확정 및 '전남의 미래를 바꿀 핵심 신규사업 100건(총 4조 7000억원) 반영, 남부권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해남, 신안, 광양, 곡성, 구례) 반영 등을 지원 사업으로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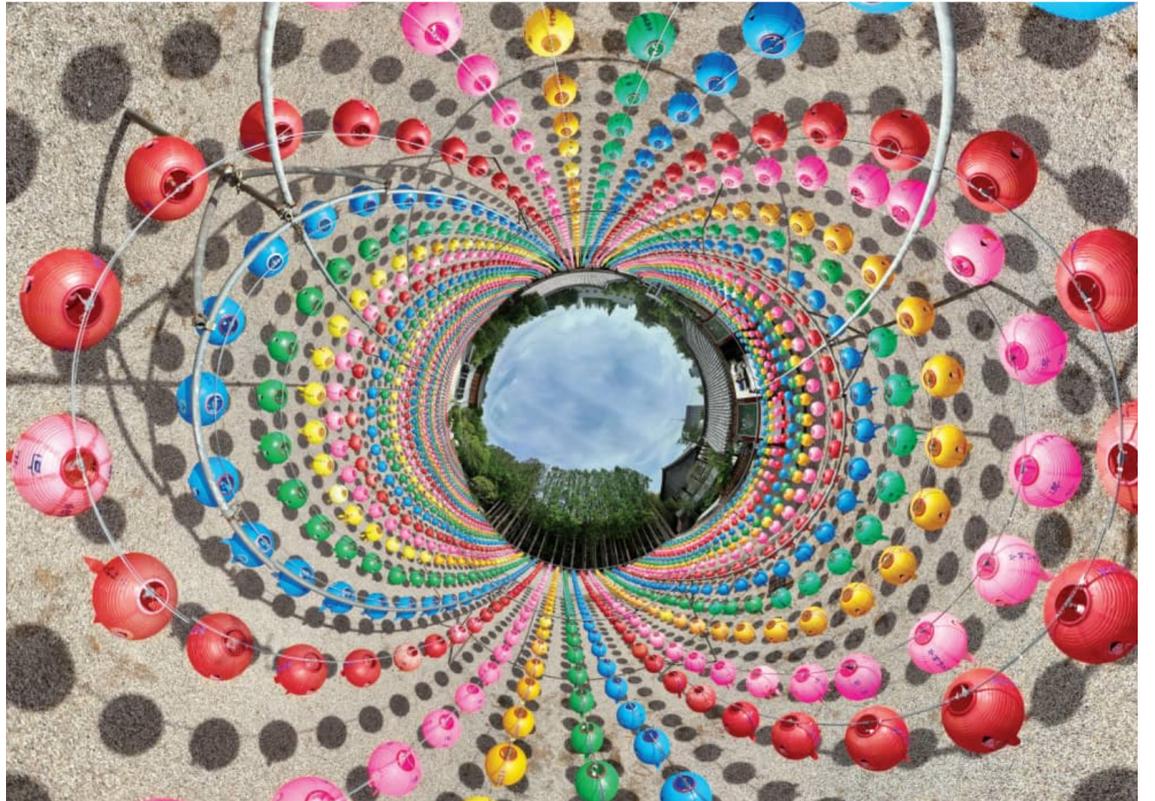
또 오는 2031년까지 고용 외나로도 일대 28.4㎢에 1조6084억원 투입해 진행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여수국가산단(석유화학), 대불국가산단(조선), 광양국가산단(철강)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지역 국가산단(3곳)을 모두 대개조하는 사업 등도 전남의 전략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1년 성과' 중에는 자치단체 주도의 특화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확대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국도(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 등 중앙부처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대중골프장 지정권, 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선 등 지방 이양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무각사 오색 연등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8일 오후 광주 서구 무각사 대웅전 앞 마당에 오색 연등이 설치되어 있다. 드론의 360도 촬영 기능인 구체촬영을 이용해 촬영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글로벌 혁신특구 2027년까지 10개 조성

국내 첫 '전면 네거티브 규제' 시행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오는 2027년까지 10개 조성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또 해외 실증거점이 구축되고 제품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오는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의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3~24일 파견

일본과 이번주 세부 조율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한다.

한일 양국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진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시찰 범위, 기간,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지원 업무를 위해 실무급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측은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찰단 파견만으로는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어려워 자칫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신성자동차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